

李 대통령, 보수인사 포용으로 與 ‘빅텐트 정당’ 면모 부각

‘합리적 보수’ 이해훈·김성식 전 의원
주요 경제정책 담당 기용에 ‘파급’
지방선거 앞두고 정계개편 분석
野, 이 후보 제명… 극우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지명한 이후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개편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8일) 새해부터 신설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해훈 전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또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엔 김성식 전 국회의원을 발탁했다.

정치권에서 이번 인선을 ‘파격 발탁’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으로 보는 것은 두 인사 모두 보수, 넓게 보면 중도보수에 속해서다. 이해훈 후보자는 3선 의원 출신으로, 지명 직전까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었다.

김성식 부의장은 재선 의원인데, 정치 입문을 민중당으로 했으나 의원직은

한나라당·국민의당(이후 바른미래당으로 합당)에서 했다. 즉 이 후보자는 보수계열 인사이며, 김 부의장은 중도 보수 성향 인사로 볼 수 있다.

보수 진영 인사들의 이재명 정부 합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던 권오을 국

가보훈부 장관의 경우도 있고, 국민의 힘과 개혁신당을 거쳤던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정책수립을 자문하는 기관 등에 보수 정치인을 기용하면서 이번 인사의 파급력은 더 크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특히 두 인사는 야권 내에서도 ‘합리적 보수’라는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지점에서 충격을 준 것도 있다. 이렇게 되면 ‘빅텐트’는 민주진영이 되는 것이며, 보수 진영은 극단적으로 윤신의 폭이 좁아지게 돼서다.

거기에는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장관직 지명을 받은 이해훈 후보자를 제명 조치한 것 역시 악수(惡手)라는 지적도 있다. 이 대통령이 실용과 통합 관점에서 이 후보자를 발탁했는데 원 소속 정당은 ‘제명’으로 응수했

으니, 당이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론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의견도 많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로 꼽히는 인사들을 포용하면서, 더 불어민주당이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지 않는 ‘빅텐트’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보수 진영에는 ‘극우’라고 불리는 세력만 남는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 후보자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옹호·탄핵 반대 집회 참석 등 이력이 있어 범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버르는 만큼,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뚫고 임명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5개월 앞둔 지방선거… 與野, 서울·경기·부산 등 치열

서울시장에 與 의원 대거 도전장
경기도엔 與 김병주·한준호·추미애
野 한동훈·김은혜·원희룡 등 예상

이재명 대통령 취임 2년차에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서울·경기·부산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전에 불이 붙으며 열띤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고(故) 박원순서울특별시장 이후 보궐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해 6년 만에 서울 탈환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 서울 전·현직 의원이 대거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

로 칭찬한 바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박홍근·박주민·전현희·김영배·서영교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거나 앞두고 있어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난립하는 양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5선(33~34대, 38~39대)에 도전한다. 벌써 4선을 했을만큼 서울 시민들에게 인지도도 높고 현직에서 경선에 도전한다는 점도 부담을 덜 수 있는 포인트다. 다만, 국민의 힘이 지방선거 공천률을 당심 70%, 민심 30%로 확정할 경우 극우 당원들이다수 포섭된 당원 구성 상 불리할 수도 있

다는 추측이 나온다.

오 시장 이외에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나 의원이 내년 선거 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경선이 오 시장과 나 의원의 양강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사도 여당에서 ‘급’ 있는 후보들이 출마를 준비하며 경선부터 혼전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집권 이후 권리당원의 선거 경선 반영 비율을 확대한 결과,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대의원이 대표한 세력보다 신흥 지지층인 권리당원의 입김이 세진 것도 경기도지사 선거전을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연합하긴 했지만, 친(親)이재명계로 평가받지는 않는 김동연 지사이기에, 정청래 지도부에서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모두 경기지사 선거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입법 추진을 이끈 6선의 추미애 의원도 경기지사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에선 원외에서 정치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석패한 김은혜 국민의 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이 꼽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기지사 출

마도 야권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지난 총선에서 동탄신도시가 있는 경기 화성 시읍에서 당선되고 지난 대선에서 3위 후보로 완주한 바 있는 이 후보는 SBS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동탄 국회의원이니 동탄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나온다면(경기지사)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산광역시장 선거전도 복잡하게 흘러가면서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정치권의 통일교 특검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의 유력 부산광역시장 후보였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전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여권에서 전 전 장관의 대안으로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 차출설이 나오지만 전 전 장관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도화3동 6-3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5-12-01호]

도화3동 6-3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분양신청 연장 공고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도화3동 6-3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통지되는 분양신청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한 조합원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아 래 -

1. 사업의 종류·명칭 및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면적

- 1) 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사업의 명칭 : 도화3동 6-3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3)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6-30번지 일원
- 4) 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 5,564.6㎡

2. 건축심의 내용(시행령 제 2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1) 건축물의 주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지하 2층 ~ 지상 27층)
- 2) 대지면적 : 5,564.6㎡
- 3) 건축면적 : 1,123.7404㎡
- 4) 건축면적 : 28,576.0235㎡
- 5) 건폐율 : 20.34%
- 6) 용적률 : 299.92%
- 7) 높이에 관한 계획 : 최고높이 77.72m
- 8)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지안의 공지 규정 1.5m 이격
- 9) 특별기구조역 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로 39.0368㎡
- 1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782.5376㎡(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3.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구분	유형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 공용	공급면적	비고
공동주택	59	81	59,9550㎡	23,4937㎡	83,4487㎡	25,2431평
	84A	42	84,9810㎡	31,6714㎡	116,6524㎡	35,2872평
	84B	26	84,8562㎡	32,1037㎡	116,9599㎡	35,3802평
	84C	16	84,9233㎡	32,1074㎡	117,0307㎡	35,4016평
	합계	165세대	11,990,5910㎡	4,581,6013㎡	16,572,1923㎡	-
근린			65,8117㎡			비고

※ 상기 내역은 건축심의 기준이며, 향후 사업시행계획(변경포함)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분양신청 자격 :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조합장전 제9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

4-1. 분양신청 방법 :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 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함. 단, 우편의 경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에 한함.

5. 분양신청 연장 기간 : 2026년 1월 9일(금)까지 (10월29) / 10:00 ~ 17:00

5-1. 분양신청 장소 : 조합사무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883번지 2층)

6. 토지등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 신고 방법 : 토지등소유자 외 권리자는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양신청 기간 내에 조합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함. 단,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에 한함.

7.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처리함.

8. 분양신청안내문 : 분양신청 안내책자 참조

9. 이주 및 철거 예정일 :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철거 및 이주 기간이 결정되며 이주 시기가 확정되면 별도 통보함.

※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분양신청안내서를 첨부하여 개별 통지할 것이며 미 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함.

[2025년 12월 30일]

도화3동 6-3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장 박 회 수 [직인 생략]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국정조사 통해 진상규명 할 것”

각 정당 지도부, 전남 무안 으로

정치권이 29일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열린 전남 무안을 찾아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각 정당 지도부는 전남 무안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1년 전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2216편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해 동체 착륙 후, 공항 활주로를 지나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해 179명의 사망자를 냈다. 국회는 12·29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한 후 국회 국정조사에 당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아직까지 우리 희생자, 유가족



김민석(왼쪽 두번째) 국무총리와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들이 원하는 만큼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우리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규명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데, 그리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엇이 그토록 많은 인명을 앗아갔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항 근처에 철새도래지가 있는데, 운항 전에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가 충분히 취해졌는지, 엔진 등 항공

기 기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사고를 키운 로컬라이저 둔덕 등 무안공항 건설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는지 등 참사의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앞서 지난 22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정특위 조사 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조사대상이다. 내년 1월20일 현장조사 및 유가족 간담회를, 1월22일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